

모심의 눈 살림의 길

# 2012년 정세와 동향

(준비호)

## 목 차

### I. 총론

### II. 2012년 정세

정치/경제/사회문화/환경

### III. 한살림 관련 동향

농업/협동조합/소비생활  
/시민사회·생명운동

## I. 총론

### 전환기의 지구촌과 한국사회

- 2012년 지구촌과 한국사회의 화두는 '전환'임. 지구촌과 한국의 정치권력 교체, 지구적 패권의 이동, 기후변화의 가속화와 후쿠시마 원전폭발 사고로 촉발된 생태적 전환과 에너지 전환도 현실의 과제가 되고 있음. 또 마야달력의 2012년 종말론에 관한 세간의 관심도 전환의 징후 중 하나임.
- 유럽을 비롯한 지구적 경제위기가 장기화되면서 사실상 경제공황으로 인식될 정도로, 현재의 경제시스템에 대한 위기감이 고조되면서 경제체제의 전환도 공론화 되고 있음.
- 종합하면, 2012년은 시대적 가치와 의식, 생활양식과 기술 및 산업 등에서 '총체적인 문명전환기'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음. 유수의 기업과 싱크탱크의 대응을 주목하며 시민사회운동·생명운동도 전환기의 대안을 모색할 때임.

### 대안적 가치의 사회적 확산과 새로운 흐름

- 생명의 위기는 '삶'의 전환적 계기. 사회경제적 양극화, 경쟁·물신주의에 대한 사회적 저항이 커지면서 재분배 욕구와 더불어 새로운 삶과 생활에 대한 열망도 높아짐.
- 후쿠시마의 충격은 기존의 물질주의적 세계관, 과학기술 만능주의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를 말해주고 있음.
- 귀촌·귀농, 삶의 속도와 규모를 줄이는 다운슈프트와 다운사이징(down sizing), 슬로우라이프, 슬로우푸드 등이 하나의 대안적 흐름이 되고 있음.
- 시민사회 안에서 생명평화의 가치가 일반화되고,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가 '생명·평화·자치·협동'의 가치를 새롭게 내세우는 등 시민운동, 사회운동도 변화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음.
- 영성적 가치, 생태적 가치, 공동체적 가치를 바탕으로 한 대안적 가치와 생활양식의 사회적 확산에 주목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함.

### 협동조합 등 대안적 경제담론 및 모델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한계

- 보수일간지 조선일보의 '자본주의 4.0' 캠페인이 시사하듯, 오늘의 경제위기는 진보·보수를 포함하여 일시적인 경기위축이 아닌 글로벌 자본주의 시스템의 구조적

인 위기 상황을 말해줌. 이에 대한 체제적 대안이 모색되고 있음.

- . 자본주의의 위기가 구조적인 문제로 인식되는 가운데, 서유럽을 중심으로 사회적 경제, 협동조합경제의 실증적 성과가 알려지면서 위기의 새로운 대안으로 부상함.
- . 2012년 UN이 정한 '세계협동조합의 해', '협동조합기본법' 통과 등을 계기로 한국 사회에서도 협동조합과 사회적 경제에 대한 관심이 고조될 것임. 반면 사회적 논의와 주체 형성이 부재한 상태에서 제도화(사회적기업법, 협동조합기본법 등)가 주는 한계도 나타나고 있음.
- . 서유럽으로부터 직수입된 대안적 경제 담론과 모델의 한계를 넘어서 한국형 대안 경제 담론과 실천 모델의 확립이 절실함. (한살림운동의 재조명과 역할에 대한 기대)

### 더욱 멀어지는 생명의 밥상·농업, 비결은 '더욱 가까운' 먹을거리에 있다

- . 기후변화와 한-미 FTA, 생태·사회적 불안정의 요인으로 '생명의 농업'과 '생명의 밥상'을 지켜나가기에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다.
- . 기후변화로 인한 생산 수급 불안이 점점 커지는 가운데, 정부는 농산물 수입을 통해 물가안정과 소비자 욕구를 충족하려 하고 있음. 결과적으로 식량자급률은 점점 떨어지고 생명주권, 식량주권은 돈으로 살 수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음.
- . 위기의 밥상과 농업문제의 해결은 결국 가까운 먹을거리, 지역 먹을거리 체계를 조기에 안착시키는 것임. 농업생산기반의 확장과 분화, 지역순환형 소비·생산 계획 등 생명운동과 생협의 적극적인 대응이 요망됨.

## II. 2012년 정세

### 1. 정치

2012년은 우리나라를 포함해 세계 주요 국가들의 권력이 교체되는 소위 '선거의 해'로 한반도를 둘러싸고 상당한 정치적 변화들이 예상됨.

- 세계 193개국 가운데 59개국, 전 세계 인구의 53%가 선거에 참여할 예정임. 특히 주요 20개국(G20) 중 한국과 미국, 프랑스, 러시아, 인도, 멕시코, 터키 등 7개 국가에서 대선이 치러짐.
- 경제 위기의 진원지인 유로존 17개국 중 4개국(스페인, 핀란드, 프랑스, 슬로베니아)에서 새로 대통령을 선출 하게 됨. 최근 대만이 대선을 치렀고, 중국도 올해 권력 교체가 이루어질 전망이며, 1년 남짓한 일본 수상의 임기를 고려할 때 일본의 권력 교체도 예상됨.
- 세계적인 경제위기와 환경위기가 올해에도 지속될 전망이나 각 국가별로 자국의 선거에 집중할 수밖에 없어 국제적인 차원의 실질적인 협력과 공조 노력은 약화될 전망이다.

김정일 사후 한반도를 둘러싼 정치환경에 불안정성이 높아져 이것이 우리나라의 경제적 부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음.

- 지난 2년간 김정은 체제로 권력 이양 작업을 진행해 왔으나 김정일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권력 교체기의 불안정 요소들이 상존하고 있음. 현재로서는 중국의 강력한 지원으로 안정적인 권력교체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남북 관계의 교착상태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며, 한반도를 둘러싼 긴장 요소가 침체된 경제를 회복시키는 데 장애 요인으로 작용될 가능성이 높음.
- 다만, 북미관계의 개선과 함께 대선을 통해 권력교체가 이루어진 이후에는 '경제 활성화'에 대한 공동의 이해관계로 인해 남북 당사국간 교류와 협력이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됨. 이 경우 북한에 대한 투자 및 개발사업의 방식과 내용이 사회적으로나 생태적으로 지속가능한 방향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회적 관심과 준비가 필요함.

올해 우리나라는 20년 만에 총선과 대선을 동시에 치르게 됨으로써, 새로운 정치 리더십의 선출에 따라 정치 지형에 상당한 변화가 예상됨.

- 4월 11일 제19대 총선과 12월 19일 제18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유권자들의 표

심을 잡기 위한 정치 개혁과 정책 경쟁이 활발하게 진행될 전망이다.

- . 소위 안철수 열풍에서 보듯이 기존 정당정치가 모두 불신을 받고 있어 여야를 포함해 '개혁과 쇄신'이 주요 화두가 되었음. 정치권은 제반 세력들 간의 연합과 통합, 재창당 등을 통해 유래 없는 정치적 지각 변동이 일어날 것으로 보임.
- . 이 과정에서 기존의 정당 구조와 영호남을 중심으로 한 지역정치 구도는 약화될 것이나, 대신 진보, 보수를 중심축으로 한 양당 구조와 세대 정치 형태는 유지 또는 강화될 것으로 전망됨.
- . 세계 경제의 불안과 장기 침체 국면에서 국내에서도 '경기 부양과 물가안정', '양극화 해소와 복지, 일자리 창출'이 선거의 핵심 쟁점으로 등장할 전망이다. 다만 이들 정책 영역 사이에는 배타적인 긴장관계가 있어, 경제적 처방을 놓고 이념 갈등이 다시 불거질 가능성도 높음. 여기에서, 정치 개혁에 대한 국민적 열망이 드높은 상황에서 정치권의 자정과 쇄신 노력이 기득권과 정파 간 갈등으로 희석될 경우 시민들의 정치에 대한 실망과 불신이 증폭되어 제3의 정치세력화로 나타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 . 한편, 정치 지형의 변화 속에서 시민사회 등 비제도권 인물들 상당수가 제도 정치권으로 진입할 것으로 전망임. 다만 운동과 정치의 경계가 무너지고 시민운동의 정치화 현상이 강화됨에 따라 향후 우리나라 시민운동 영역에 적지 않은 부담과 과제를 남길 것으로 보임.

### 소셜 미디어(SNS)의 확산으로 시민들의 참여와 여론형성 방식이 새로운 형태로 조직화 되고 있음.

- . 고도성장과 함께 빈부격차에 따른 양극화 문제를 안고 있는 중국에서는 권력 및 기득권층의 부패와 비리에 대한 불만과 분노가 기층 인민들을 중심으로 표출되면서 SNS를 통해 반체제 운동으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음.
- . 러시아에서는 대통령 재출마가 기정사실화 된 푸틴에 대한 피로감이 커지고 있고, 부정선거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SNS를 통해 확산되면서 국민적 저항을 불러일으키고 있음.
- . '자스민 혁명', '아랍의 봄'으로 불리는 이슬람 민주주의의 확산으로 수십 년간 철권통치 해 오던 독재 체제가 시민들의 힘으로 무너졌으며, 올해에도 이런 현상은 지속될 전망이다. 다만, 중동 지역의 정치적 불안정이 유가 상승 등으로 세계 경제에 부담을 줄 가능성도 높음.
- . 인터넷 문화가 발달한 우리나라에서 SNS는 정치 참여의 새로운 수단으로 급속히 보편화되고 있음. 과학기술의 변화가 시민들의 참여 의식과 결합해서 기존의 정책

과 제도의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는 가운데, SNS는 신문과 방송 등 정통 미디어를 통한 여론형성 메커니즘에도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임.

## 2. 경제

**유럽의 재정위기 등으로 올해도 세계 경제는 불안정과 저성장 상태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 . 2008년 금융위기 극복을 위해 각 국가별로 취했던 비상조치의 영향들이 작년 하반기부터 심각한 부작용을 나타내면서 경제적 불안정을 높이고 있음. (막대한 재정지출 --> 재정위기 --> 긴축재정, 물가상승 --> 경제위축, 소비심리(물가불안과 고용불안) 하락 --> 경제적 불안과 저성장의 악순환)
- . EU차원의 적극적 대응에도 불구하고 유럽 9개국과 유럽재정안정기금(EFSF)에 대한 신용등급 강등 조치가 내려진 가운데, 그리스의 국가부도와 이탈리아, 스페인의 구제금융 신청에 따라 유로화가 해체되고 세계 금융위기로 확산될 가능성도 있음.
- . 미국 경제의 지속적인 하락에 따른 저성장 흐름의 지속과 유럽 국가들의 재정긴축과 소비의 위축에 따른 내수 침체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수출 국가들의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됨.
- . 일본은 고령화와 저성장에 따른 국가채무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해온 데다가 후쿠시마 원전 사고 수습의 지연과 방사능 유출 확대로 국가의 지속가능성 자체가 위협받고 있음.
- . 중국은 그동안 7-9%의 고도성장을 지속해 왔으나 2011년 하반기 들어 미국, 유럽 등 선진국가들의 경기침체에 따라 수출의 둔화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함. 2012년에는 내수 중심의 경제운영이 이루어질 전망이어서 대중 수출이 미국의 두 배 수준인 우리나라로서는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음.
- . 경제와 밀접한 국제 원유 가격은 세계 경기 침체로 가격 안정세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으나, 최근 중동지역의 정치적 불안정이 변수가 되고 있음. 특히 이란의 핵개발을 둘러싼 갈등으로 미국이 이란의 원유 수출을 원천봉쇄하기 위한 제재법안(국방수권법)을 통과시켜 페르시아만을 중심으로 긴장이 고조됨에 따라 국제 유가가 급등할 가능성이 높음. 이런 상황에서 미국의 대 이란 제재 조치에 이란산 원유 의존율이 9.8%인 우리 정부가 동참하기로 하여 국내 경제(건설 및 에너지 분야 등)에 부정적 영향을 줄 가능성도 높음.

**신자유주의 경제 체제에 대한 세계 시민들의 비판과 분노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지속가능한 경제 모델에 대한 탐색이 주요 과제로 등장하고 있음.**

- 미국발 금융위기가 유럽국가의 재정위기로 이어지면서 세계 경제가 요동치고 있는 가운데, 신자유주의 경제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음. 지난해 1%의 기득 특권층에 대한 99%의 분노로 표현되는 소위 '월가 점령시위'(occupy wall street)가 미국은 물론 세계 80여개 나라로 확산되었으며, 이런 흐름은 올해에도 지속될 전망이다.
- 이런 가운데 매년 초 세계경제의 동향을 가늠하는 '세계경제포럼'(다보스포럼)이 올해 1월 25일에서 29일까지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림. 포럼에서는 올해의 전체 주제를 "거대한 변환(The Great Transformation): 새로운 모델의 형성(Shaping new models)"으로 잡고 '성장과 고용 모델', '리더십과 혁신 모델', '지속가능성과 자원 모델', '사회와 기술 모델'이라는 4개의 세부 주제를 다룰 예정임. 포럼 주최측은 지구적인 도전 앞에서 자본주의 시장경제에 대한 혁신적 아이디어와 해법을 모색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 한편, '세계경제포럼'에 대항하여 반세계화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매년 개최 해 오던 '세계사회포럼'도 1월 24일부터 29일까지 브라질 포르투알레그레에서 열릴 예정임. 올해는 '자본가의 위기(Capitalist Crisis), 사회 환경적 정의(Social and Environmental Justice)'라는 주제로 진행되며, 6월 같은 곳에서 열리는 'Rio+20 지속가능개발 UN 정상회담'에 대한 대안으로 '보통사람들의 정상회담'(Peoples' Summit)을 준비하기 위한 토론회도 진행할 예정임.

**세계경제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의 2012년 경제상황도 어려워지고, 소비심리도 상당히 위축 상태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 전문가들은 세계 경제성장률이 하락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2010년 4.9% --> 2011년 3.8% --> 2012년 3.5% 전망). 이런 가운데 정부 또한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을 작년 4%에서 올해 3.6%로 낮춰 잡고 있음.
- 경제성장을 하락에는 '수출 동력 약화'(세계경제 침체, 원화강세 기조), '내수 부진'(민간소비 위축, 부동산, 건설시장 침체), '정부의 경기부양능력 약화'(국가채무 및 가계부채 증가, 선거)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음.
- 이런 가운데 국가채무는 2008년에 약 300조원에서 2011년에 435조원으로 증가되고 개인 금융부채는 약 1천조원에 달하는 상황에서 공공요금과 전월세 등 서비스 가격은 상승됨으로써 올해 소비심리는 상당히 위축될 전망됨.
- 따라서 선거 과정에서 정부 정책의 초점은 '생활물가 안정'에 맞추게 되고, 물가와

직결된 농산물 수급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공급의 안정성 확보와 유통구조 효율화에 정책적 역량을 집중할 전망이다. (해외 농산물 수입 확대, 농협의 조직 개편에 따른 직거래 사업 활성화 등)

### 대형 유통자본의 '골목 경제'로의 진출로 경쟁이 심화 되면서 영세 자영업자들의 몰락 가능성이 더욱 높아짐.

- 직장에서 떠밀려 나온 50대 베이비붐 세대들의 막다른 선택으로 서민형, 생계형 점포가 크게 늘어나고 있으나, 내수 부진과 매출 급감에 따른 폐업으로 빈곤층으로 추락할 가능성이 높음.
- 2011년 하반기 들어 자영업자 수가 크게 늘어나 전국 자영업자 수는 약 570만명으로 전체 경제활동인구의 22.4%(약 5명중 1명꼴)를 차지. 이런 가운데 SSM(기업형수퍼마켓) 등 대형 유통자본의 골목경제 진출로 소규모 영세 마트는 더욱 심각한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
- 특히 대형마트 업계 2위인 홈플러스가 올해부터 '365플러스편의점'이라는 이름으로 편의점 사업에 본격적으로 뛰어들 전망. 홈플러스는 편의점 사업 진출을 베이비붐 세대 은퇴자의 소자본 창업을 지원하는 것으로 명분을 삼지만 그동안 비판 받아온 SSM에 대한 규제를 피하는 전략적 선택으로 볼 수 있음.
- 홈플러스의 진출은 패밀리마트, GS25, 미니스톱 등과 함께 편의점 업계 간 경쟁을 심화시킬 것이며, 특히 홈플러스 편의점에서는 농·축·수산 등 신선식품과 생필품을 주로 취급함으로써 생협 단체들이 운영하는 매장의 수익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음.

### 자유무역협정(FTA)의 확대 추진으로 농어촌과 중소기업들의 생존이 크게 위협 받을 전망이어서 정책의 전환과 함께 후속 대책 마련이 필요함.

- '한자도 고치지 않겠다'던 한미 FTA안을 미국 요구에 따라 재협상을 통해 미국이 먼저 비준하고 우리나라는 작년 말에 국회에서 날치기로 통과시킴.
- 세계 최강의 농업생산력을 보유한 미국과의 FTA 체결에 따른 예상 피해액은 향후 15년간 총 12조 2,252억원이며, 이에 대한 정부의 대응으로 농업부문에 21조 4천억원이 투·융자될 예정이나, 정부의 정책 방향이 자본 집약 및 기업농 중심의 농업 경쟁력 강화에 맞춰져 있어 중소농의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됨.
- 미국과의 FTA 체결로 관세율 인하에 따른 미국산 과일의 대량 수입으로 국내 제철과일 생산 농가의 타격이 본격화 될 전망이다. 미국산 농산물 585개 품목(전체 협상 품목 수의 37.9% 수준)에 대한 관세가 즉시 철폐되고 수입과일 품목이 늘어날 수록 국산과일 소비 감소와 함께 국내 과수농가의 피해로 커질 전망이다.

- 품목별로 계절관세율을 적용하지만 관세율이 낮아진 오렌지와 무관세로 수입된 체리는 참외, 수박, 복숭아 등 하절기 출하 과수품목의 소비감소를 초래하여 피해가 우려됨.
- 올해 총선, 대선 과정에서 한미 FTA가 선거 쟁점화 될 가능성이 높음. 농어촌 및 중소기업인들의 반발을 고려해 수정보완을 위한 추가협상에 대한 논의가 나올 수 있으나, 한미 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실현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보임. 다만 FTA 체결에 따른 농어촌 및 중소기업 피해 구제를 위한 후속조치는 선거 과정에서 여론 향배에 따라 확대되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음.
- 이런 가운데 지난 1월 10일 중국에 국빈 방문 했던 이명박 대통령은 한중 FTA 추진을 공식화 했으며, 협상 개시에 필요한 국내 절차를 늦어도 3월까지 마무리하고 1차로 농수산업 분야, 2차로 공산품 분야 협상에 들어가기로 함.
- 2011년 기준 전체 교역액의 1/5(2000억 달러)을 차지하는 중국은 한국의 최대 교역국이며 인적교류도 연간 600만명에 이르는 상황에서, 한중 FTA가 발효될 경우 자동차와 부품, 전자가전, 석유화학, 철강업종은 유리할 것으로 전망되나, 섬유, 비철금속, 정밀화학, 생활용품, 농수축산업은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측됨. 특히 농수축산업은 관세가 폐지되면 가격이 50% 인하될 경우보다 수입이 2배 이상 늘어날 전망이다. 한중 산관학 공동연구 결과에 의하면 한중 FTA로 국내 농업생산은 최대 14.7%까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한EU, 한미 FTA에 이어 한중 FTA까지 발효될 경우 유럽산 돼지고기, 미국산 과일 및 소고기, 중국산 과일 및 신선채소의 수입으로 국내 농업 기반이 크게 흔들릴 우려가 있고, 중국 의존도가 커짐에 따라 중국 경제의 리스크가 국내 경제에 그대로 전달될 가능성이 높음.

### 3. 사회문화

젊은 세대의 닫힌 사회에 대한 좌절감과 분노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표출되고 있음.

- 사회 양극화의 심화와 주거비·교육비 등의 급증으로 계층 상승 가능성이 더욱 어려워지고 미래에 대한 희망을 잃어버린 사회로 급속히 변화되고 있음.
- 2011년 통계청 사회조사 결과 "일생 동안 노력한다면 본인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아질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 긍정적으로 응답한 비율은 28.8%에 불과(2년 전 조사에서는 35.7%), 부정적 응답 비율은 58.8%(2년 전 조사에서는 48.1%)로 증가함. 또한 자식들의 계층 상승 가능성에 대한 긍정적 응답율도 48.4%에서 41.7%로 하락한 반면, 부정적 응답율은 30.8%에서 43.0%로 크게 증가.

- . 계층 이동의 사다리 구실을 했던 교육이 현재 오히려 양극화 된 계층구조를 고착화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는 가운데, 청소년 자살문제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등장했음. '단힌 사회'에 대한 절망감과 경쟁에 대한 피로감과 분노가 청년층은 물론 어린 학생들 사이에서 나타나고 있음.
- . 2011년 초부터 대학생(카이스트, 한예종 등) 자살과 학교 폭력에 따른 청소년들의 연이은 자살 문제가 큰 사회문제로 등장. 초중고교생 및 대학생 자살자 수가 2003년 이래로 꾸준히 증가해 왔고, 2011년 통계청 조사결과 15-24세 청소년 사망원인의 1위가 '자살'로 나타남.
- . 15세-19세 청소년 중 '성적과 진학 문제' 때문에 자살을 고민한 학생이 53.4%로 나타났고, 대학생 중 52.9%가 '금전적 이유, 취업난'을 이유로 자살 충동을 느낀 적이 있다고 함.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늙어가는 대한민국' 현상이 가속화 되면서 사회경제적 부담이 높아지고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함.**

- . 출산율은 이미 세계 최저수준('10년 1.23명)으로, 2017년에 유소년(684만명) 보다 노인(712만명)이 더 많은 인구 역전 현상이 나타나고, 생산가능 인구는 감소 할 것으로 예상.
- . 고령화율의 증가,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 본격화 등으로 고령사회가 가속화 되고 있는 가운데, 2012년부터 총부양비가 증가 추세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 생산가능 인구 대비 노인·유소년 비율인 '총부양비'는 2010년 37.3%에서 2012년 36.8%, 2020년 40.7%, 2030년 58.6%가 될 전망.
- . 2050년 고령화율 전망을 보면 한국은 38.2%로 일본(39.6%)에 이어 OECD 국가(평균 25.8%) 중 고령화율이 2위가 될 것으로 예상.

**핵가족화와 맞벌이 가구의 증가, 결혼 기피 현상 등으로 전통적인 가족의 구성과 역할이 해체되고 있음.**

- . 가족의 평균 가구원 수가 급속히 줄어들고 있음. (1980년 4.62명, 1990년 3.77명, 2000년 3.12명, 2010년 2.69명)
- . 30대 인구의 미혼율이 급속히 높아지고 있음. (1980년 3.3%, 1990년 6.8%, 2000년 13.4%, 2010년 29.2%)
- . 이혼 등으로 한 부모 가족, 조손가족 등 취약 가구가 증가하여 가족 차원의 돌봄 기능은 약화되고 있음. (1990년 17만, 2000년 55만, 2010년 127만)

#### 4. 환경

후쿠시마 사태 이후 핵발전소의 안전성 논란이 커지고 있는 핵발전소 확대 정책을 추진하는 정부와 탈핵과 에너지전환을 요구하는 시민사회 간 갈등이 심각하게 표출될 전망이다.

- . 동일본 대지진 이후 후쿠시마 원전 폭발사고로 핵발전소 안전성에 대한 경각심이 세계적으로 고조되는 가운데, 탈핵(반핵)과 에너지전환을 요구하는 세계 시민사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
- . 현재 일본은 54기의 보유 원전 중 48기의 운전이 중단된 상황이고, 1월 7일 발표된 원자력 규제법 개정안에서 '40년 운전 제한한도' 규정을 신설하여 늦어도 2050년에는 모든 원전을 폐쇄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 국내에서는 박원순 서울시장의 올해 1월 9일 <15대 시정운영계획>을 통해서 '자원과 에너지를 소비하는 도시에서 생산하는 도시로 전환'하겠다고 비전을 발표하고 실행계획으로 '에너지 절약과 생산으로 원전 1기 줄이기'와 '시민 참여형 신재생에너지 생산'을 발표함.
- . 반면, 정부는 제 4차 원자력진흥종합계획(2012~2016)을 확정하여 전력 중 핵에너지 비중을 2030년까지 지금의 34%를 59%로 확대한다고 밝혔고, 작년 12월 22일 한국수력원자력은 강원도 삼척과 경북 영덕을 새 원전 후보지로 선정 발표함.
- . 이런 가운데 올해 3월 11일 후쿠시마 사태 1주년을 계기로 일본은 물론 전 세계에서 반핵과 평화를 요구하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조직적으로 표출될 예정이고, 우리나라에서는 '경북 영덕핵발전소 반대투쟁위원회', '삼척 핵발전소 유치백지화 투쟁위원회'를 비롯한 지역단체와 노동, 환경, 시민운동 영역이 참여하는 '핵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 단체를 중심으로 3월 11일 대규모 시민 집회가 이루어질 예정임(서울은 서울 광장에서).
- . 한편 정부는 올해 3월 26-27일 세계 50여개국 정상에 참여하는 핵안보정상회의를 서울에서 개최할 예정인데, 이 시기에 전 세계 반핵운동단체들이 우리나라에 모여 항의 집회를 할 계획을 세우고 있음.
- . 방사능오염과 핵발전소의 안전성 문제는 올해 총선, 대선 시기와 맞물려 1년 내내 중요한 정치사회적 이슈로 자리 잡게 되고, 탈핵을 핵심 이슈로 내세운 녹색당도 등장할 가능성이 높음.

기후변화 현상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가운데 국제적인 기후변화 협약 체제는 무력화되고 있어 특히 농업 분야의 기후변화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함.

- 작년 11월 기상청과 정부 부처들이 공동으로 발간한 우리나라 기후변화 예상 보고서에 따르면 과거 100년간 진행된 만큼의 기후변화가 향후 10년 내에 급격히 진행될 것으로 전망.
- 급속한 온난화로 2050년에 한반도는 겨울이 27일 줄고 여름은 19일 늘며, 해수면이 27cm까지 상승하고 폭염과 집중호우 같은 극한 기상도 대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
- 기후변화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작년 11월 18일 남아공 더반에서 열린 제17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는 교토의정서 연장을 논의하였고, 총회 직후 캐나다가 교토의정서 탈퇴를 선언함. 결국 온실가스 배출량 세계 1위인 중국과 3위인 인도는 교토의정서 상 감축 의무를 지지 않고, 2위인 미국은 교토의정서 비준을 하지 않았고, 러시아(4위), 일본(5위), 캐나다(7위)는 2차 기간 불참을 선언하여 교토의정서가 사실상 유명무실해져서 유엔 중심의 기후변화대응체제가 붕괴될 수도 있는 상황임.
- 이런 가운데 농림수산식품부는 작년 말 기후변화 대응 세부실천계획('11~'20)을 발표하고, 기후변화대응을 농정의 주요 과제로 삼음.
- 정부는 2020년까지 1조원 규모 R&D 추진, 기후변화 통합감시망 구축, 기후변화 적응 품종 개발, 시설재배 확대 및 아열대 소득작목 개발, 기후변화대응센터 설치, 온실가스 감축 등의 대책을 내놓음.
- 2012년부터 쌀(곡물), 상추(채소) 등 5개 품목을 대상으로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를 도입하여 등급별 인증마크를 부여하고 탄소포인트제 도입 등 저탄소 농축산물 활성화 종합 대책도 마련할 계획임.
- 식품부문에서는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 관리제를 통해 기업들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할 예정으로 2012년에 26개 관리업체에 대해 시행하고, 점차 대상 업체를 확대할 계획임.
- 또한 2012년에 농어업부문에 처음으로 탄소상쇄사업을 시범 추진하여 농어업인의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고, 감축의무가 있는 기업은 이를 구매토록 유도하기 위하여 '농업탄소감축사업단'을 2012년부터 운영할 예정임.

**'Rio+20 회의'를 계기로 '지속가능발전'과 이것을 실현하기 위한 경제적 대안에 대한 모색이 국제사회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질 전망이다.**

-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세계의 노력을 점검하고 실천 의지를 다지기 위한 국제회의인 '세계 지속가능발전 정상회의'(WSSD)가 2012년 6월 20-22일 브라질 리우데자

네이로에서 개최될 예정임.

- . 지난 1992년 브라질 리우에서 열린 유엔환경개발회의(UNCED) 20주년을 맞아 열리는 이번 회의에서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경제적 역할을 다양하게 모색할 전망이다.
- . 21세기에 들어서 세계의 보편적인 가치로 자리 잡은 지속가능발전의 실현을 위해 정부와 기업, 시민사회 공동의 노력과 협력이 강조되어 왔으나, 현 정부 들어서 토건형 '녹색성장'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면서 지속가능발전 논의는 실종되고 시민사회와의 관계도 단절됨.
- . 따라서 이번 세계 지속가능발전 정상회의를 계기로 그동안 침체되었던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논의를 활성화시키고 민관 협력을 통한 실천을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음. 다만 시민사회와 환경운동의 위상과 역할이 약화된 데다 정부와의 관계가 소원해진 상태에서 총·대선 선거가 있는 상황에서 기대만큼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는 불확실한 상태임.

#### 폐기물의 해양투기가 금지됨으로서 축산분뇨와 음식물쓰레기의 배출량 감소와 생태적 처리를 위한 민관 공동의 노력이 필요함.

- . '폐기물 배출에 따른 해양오염 방지에 관한 국제협약'이 발효됨에 따라 올해 1월 1일부터 가축분뇨와 하수오니의 해양투기가 전면 금지됨으로써 가축분뇨가 액·퇴비화와 에너지 생산은 물론 자원순환형 농업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생산 농가들의 노력이 필요하며, 소규모 축산 농가도 함께 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지원 확대가 요구됨.
- . 2010년 기준 전체 가축분뇨 발생량 46.5백만톤 중 87%(40.3백만톤)는 퇴비·액비로 자원화 되고 있으며, 9%(4.2백만톤)는 정화처리 후 방류되고 있고, 2%(1.1백만톤)는 해양에 투기되고 있음. 2011년 11월까지 0.73만톤이 해양에 투기됨.
- . 한편, 관련 협약에 따라 2013년에는 음식물류 폐수의 배출 금지가 예정되어 있어 식생활문화 개선을 위한 시민사회 차원의 보다 적극적인 노력과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함.

### Ⅲ. 한살림 관련 동향

#### 1. 농업

국제 곡물 가격의 변동 폭이 커지고 농산물 수입량은 증가함으로써 생산 농가들의 경제적 어려움은 더욱 가중될 전망이다.

- 2011년 가을부터 주요 곡물 생산국의 기후가 전반적으로 양호하여 국제 곡물 가격이 하락하기 시작했으며, 올해 국제 곡물 생산량은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세계식량기구는 예상하고 있음. 하지만 기후변화와 세계경제의 변화 정도에 따라 국제 곡물 가격이 하향 안정세를 지속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됨.
- 한편 한-미, 한-EU, 한-중 FTA 체결로 농산물 수입량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 또한 소비자 물가안정 대책의 차원에서 농산물 수입 기조를 유지 확대할 전망이어서 생산 농가들의 경제적 어려움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

농지 규모의 감소와 농지 상품화의 확대로 농지 가격이 상승하여 귀농자 등 농지 실수요자들의 접근성이 악화되고 있음.

- 국내 전체 경지 면적은 1,736.8천ha로(2009 기준) 지난 10년간 152천ha가 감소했고, 2009년 농지법 개정으로 경지 규모의 감소 추세가 커지고 있음.
-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농지 가격 상승이 지속되고 있음. 2010년 기준 임차 농지가 전체 농지의 47.9%, 임차 농가가 전체 농가의 62.2%이며, 2008년 기준 임차 농지 소유자 중 61%가 비농가로 나타남.

구제역, 유가 및 사료가격 상승, FTA 등에 따른 축산물 수입 증가, 과잉 생산과 가격 폭락 등으로 인해 축산 농가가 생존의 위기에 놓여 있음.

- 고유가, 기후변화, 곡물 유통과 저장 비용 증가, 바이오디젤 수요의 증가 등으로 2011년 초부터 국제 곡물 가격이 높게 형성되었으며, 여기에 환율 상승까지 더해 배합사료의 원재료 가격이 치솟아 축산농가에 큰 타격이 되고 있음.
- 2011년 구제역 이후 정부의 한우 출하 금지 조치와 한우농가의 한우 입식 증가 결과 한우 생산량이 크게 증가 한데다(작년 말 기준 295만 마리), 사료값 및 유가 상승으로 생산가격은 상승하였고, 호주 및 미국산 소고기 수입은 늘어남에 따라 판매 부진과 가격 폭락 사태를 겪고 있음.
- 정부(농림식품수산부)는 사태 해결의 차원에서 군부대 급식을 통한 한우 소비 촉

진과 함께 한미 FTA 등 시장개방에 따른 축산시설 현대화를 위해 올해 관련 예산을 증액시킴(2,450억->7,000억). 한편 기업농부터 축산업 허가제를 도입하고 소 값 안정을 위한 암소 도태자금(300억원)을 신설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음.

**친환경농업에 대한 지원은 소폭 확대되지만, 친환경농업의 근간을 뒤흔들 수 있는 유기식품 동등성 제도의 도입이 입법 예고되어 논란이 예상됨.**

- 친환경농업에 대한 유기질 비료 지원이 작년(250만t)보다 올해(270만t) 늘어날 전망이며, 친환경농업육성법을 개정해 친환경농산물의 재포장 취급자도 의무적으로 인증을 받도록 하는 의무인증 제도를 도입할 예정임.
- 한편, 외국의 정부나 민간기관이 인증한 유기식품을 국내의 법적 인증절차를 밟지 않고도 국내 인증마크를 사용, 판매할 수 있게 하는 '유기식품 동등성 제도' 도입을 담은 친환경농업 육성법 전부 개정안이 입법 예고되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며, 이에 대해 환농연 등 친환경농업인 단체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음.

## 2. 협동조합

**유엔이 정한 '세계 협동조합의 해'를 맞아 협동조합 진영의 상호 협력 하에 협동조합이 가진 사회적 역할과 의미를 널리 알려낼 필요가 있음.**

- '세계협동조합의 해'(IYC)를 맞아 '고용창출', '빈곤해소', '사회통합', '지속가능발전' 등 협동조합이 가진 사회적 역할을 강조하고 확산시키기 위한 노력들이 세계 곳곳에서 진행될 예정임.
- 작년 ICA 칸쿤 총회(2011년 11월 14-18일)에서는 ICA 116년 역사 중 최대 규모인 총 96개국 269회원단체 중 78개국 2103명 참가하여 위기의 세계 자본주의 경제에 대해 성공적인 기업 모델이자 가치에 기반한 혁신 모델로서 협동조합의 대안적 의미를 제시하고 알려낼 것을 강조함.
- 현재 국가별로 1, 2년 전부터 2012년 IYC 행사를 위한 준비를 다각적으로 해 오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정부와 협동조합 진영의 관심과 노력 부족으로 준비 과정이 매우 부족했음.
- 우리나라는 ICA에 가입한 6개 협동조합단체들(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아이쿱)이 만든 한국협동조합협의회가 있으나 그동안 형식적으로 운영되어 왔으며, 간사 단체인 농협의 관심과 인식 부족으로 전체 협동조합 영역을 아우르는 준비위원회를 제대로 구성하지 못했음.

- 최근 협동조합연구소, 아이쿱 등의 제안으로 준비위원회 구성에 대한 논의가 시작됨. 현재 ICA 가입 단체들 중심으로 행사를 준비할 것인지, 국내 다양한 협동조합 운동 영역들이 함께 참여할 것인지에 대해 논의 중에 있음.
- 생협운동에서 한살림이 차지하는 규모와 역사성을 고려할 때 '세계 협동조합의 해'가 가지는 의미를 조합원에게 적극 알려낼 필요가 있으며, 동시에 생명운동과 협동조합운동의 창조적 결합을 통해 한살림운동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한국형 협동조합운동의 모델로서 한살림이 가지는 의미와 역할을 정리해 공유할 필요가 있음.

### 협동조합기본법 제정에 따라 다양한 유형의 협동조합 설립이 가능해짐.

- 작년 말 협동조합기본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2012년 12월 1일부터 5명 이상이 모여 시·도지사에게 신고하면 금융·신용을 제외한 모든 산업부문에서 자유롭게 협동조합 설립이 가능해 짐.
- 법안 내용에는 영리 목적이 가능한 "협동조합"과 비영리 목적으로 하는 "사회적협동조합"을 구분하고, 조합원은 출자좌수에 관계없이 1인 1개의 의결권 및 선거권을 가지며, 매년 7월 첫째 주를 협동조합 주간으로 지정함.
- 다양한 사회적기업, 복지시설, 자활단체 등이 협동조합으로 전환할 전망이며, 이윤보다 지속가능성을 목표로 하는 다양한 형태의 협동조합들의 새로 출현할 가능성이 마련됨. 다만 제도적인 환경의 변화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협동조합 및 관련 영역들이 보다 세밀한 검토와 준비가 필요함.

### 생협전국연합회 설립이 한계를 맞게 됨.

- 개정 생협법의 요건에 따라 생협전국연합회 설립을 준비해 왔으나 유사 의료생협의 불참과 iCOOP 생협이 참여 의사를 밝히지 않음에 따라 생협전국연합회 설립이 불투명해짐. 이로 인해 '유사 의료생협으로 인한 생협 이미지 손상 우려'와 '생협 진영의 대정부 창구 단일화 마련'이 중요한 과제로 남게 됨.

## 3. 소비생활

###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소비자들의 권리 의식과 합리적 선택이 강화될 전망.

- 정부(공정위)는 올해부터 소비자들의 합리적 선택을 유도해서 기업에 영향력 주기 위해 '컨슈머 리포트'의 한국판을 만들기로 함. 미국의 유명 소비자 매체인 '컨슈

며 리포트'(유료독자 720만, 인쇄본 구독자 400만)는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사용 평가와 그 결과의 공개로 기업에 상당한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정평이 나있음.

. 1월 11일부터 온라인 시험판 '스마트컨슈머'(<http://www.smartconsumer.go.kr>) 홈페이지를 열고, 한국소비자원, 국토해양부 등 20여개 기관, 40개 상품 정보 관련 사이트를 모아 가격정보 등을 공개할 예정이며, 소비자들이 사용 후기를 올리도록 참여를 유도해서 상대적으로 가격과 품질이 우수한 기업이 소비자들의 선택을 받도록 안내할 예정. 여기에는 생활협동조합 페이지를 메뉴로 구성하여 생협의 기능과 위치를 소개하고 있음.

. 정부는 소비자 시민단체에게 상품 비교조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하여 상품의 가격정보를 공개하도록 할 예정임. 또한, 담합과 허위광고 등으로 피해를 본 소비자들이 기업에 배상을 요구할 수 있도록 정부가 소비자단체의 소송을 지원하고, 소송 범위도 행위금지 청구에서 손해배상으로 확대하기로 함. 오는 3월부터는 '한국형 컨슈머리포트'를 발행하기로 하고 대상 기업과 품목도 확장할 계획임. 이런 조치에 대해 기업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으나 소비자들의 높은 인식과 시민단체들의 강력한 요구에 힘입어 예정 대로 진행될 전망이다.

### 식품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식이 높으며, 위해성에 대한 우려가 1차 농산물에서 가공식품으로 옮겨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한국소비자원 '2011년 국민소비의식 조사' 결과 소비자의 79.2%가 농·수·축산 식품의 안전성에 대해 '걱정된다'고 응답함.

. 소비자 건강을 해치는 위해요인(복수응답)으로는 '유해 식품첨가물'(39.1%), '환경호르몬'(38.8%), '유전자 조작식품'(28.6%), '중금속 오염'(27.6%), '농약오염'(23.1%) 순으로 꼽음. 한편, 2007년 조사에서는 '농약오염'(39.0%), '중금속 오염'(31.3%), '유전자 조작식품'(25.2%) 순으로 나타남.

. 4년 사이에(2007-->2011) 소비자들의 식품 위해 요인에 대한 인식이 중금속, 농약 등 1차 농산물과 관련한 것에서 식품첨가물, 환경호르몬 등 가공식품과 관련한 것으로 옮겨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유기가공식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구매 의사는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농촌경제연구원 조사(2011)에 따르면 국산 유기가공식품을 구매한 경험이 있는 사람 가운데 58.8%가 소비확대 의향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으며, 유기가공식품을 구매한 경험이 없는 사람 가운데 80.6%가 소비를 늘리겠다고 응답함.

. 향후 구입을 원하는 유기가공식품으로는 구매 경험 유무와 관계없이 '신선반찬

류'(20.3%)와 '밀가공식품'(20.3%)에 대한 선호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음. 그 다음으로 구매 경험이 있는 사람은 '쌀가공식품'(14.5%)과 '조미양념류'(11.8%), '유아식,분유'(11.5%), '과자류'(9.8%), '음료'(7.3%) 순으로 답한 반면, 구매 경험이 없는 사람은 '조미양념류'(11.7%), '음료'(8.7%), '쌀가공식품'(6.8%), '유아식,분유'(5.8%), '과자류'(4.9%) 순으로 답함.

### 친환경 유기농 식품의 시장규모는 계속 확대 되어 왔으며, 유기농산물 생산량도 계속 증가 추세에 있음.

- 2011년 기준 친환경 유기농 식품 시장규모는 2010년보다 20% 증가한 1조 6302 억원으로 증가하였고, 부문별로는 유기식품 8151억원, 신선식품 4128억원, 가공식품 4023억원 규모로 나타남.
- 저농약 농산물 인증 중단 등의 영향 등으로 2010년 친환경농산물 전체 생산량은 2009년(235만 8000톤) 보다 감소(221만 6000톤) 된 것으로 나타남. 2010년 기준 친환경농산물 생산량은 전체 농산물 생산량의 12.0%, 재배농가는 15.4%, 재배면적은 11.3% 차지.
- 한편, 유기농산물 생산량은 2009년을 제외하고 계속 증가했으며, 재배농가와 재배 면적도 증가해 왔음.

|      | 2001년  | 2003년   | 2005년   | 2008년    | 2009년    | 2010년    |
|------|--------|---------|---------|----------|----------|----------|
| 생산량  | 1만671톤 | 3만3287톤 | 6만8091톤 | 11만4649톤 | 10만8810톤 | 12만2243톤 |
| 재배농가 | 442호   | 2748호   | 5403호   | 8460호    | 9403호    | 1만790호   |
| 재배면적 | 450ha  | 3327ha  | 6095ha  | 1만2033ha | 1만3343ha | 1만5518ha |

### 가계 소비지출 중 생활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증가하고, 이중 식생활비의 비중과 부담이 커지고 있음.

- 가계 소비지출 중 '생활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2007년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해 옴.(2007년23.3% --> 2008년 23.5% --> 2009년 23.7% --> 2010년 23.8% --> 2011년 24.3%)  
생활비는 식료품비(식료품+비주류음료)와 주거비(주거+수도+광열)를 합산한 것임.
- 지난해 식품물가(식료품+비주류음료) 상승률은 7.9%로 OECD 32개국의 평균보다 2배 이상 높은 수준임. 식품물가 상승률 증가에는 이상기후와 여름철 홍수, 유가와 원자재 가격 상승이 주된 원인으로 지목.
- 대한상공회의소의 조사 결과 2012년 새해에 가계의 가장 큰 부담 요인으로 '물가

불안'(54.6%)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가계부채'(26.2%), '소득감소'(13.4%), '자산가치 하락'(5.4%) 순이어서, 소비자의 '체감 물가'가 매우 높은 것을 알 수 있음.

작년 말 발표한 한국소비자원의 '국민소비의식 조사' 결과(복수응답) 12개 가계 지출 분야 중 '식생활부담'(53.6%)이 가장 많고, 그 다음 '교육비'(43.4%), '교통비'(30.6%), '대출이자비용'(24.0%) 순으로 나타남. 2002년과 2007년 조사결과와 비교해 보면 가계 소비지출 분야에서 '식생활비'가 차지하는 부담이 점점 더 커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 구 분 | '02년        |      | '07년        |      | '11년        |      |
|-----|-------------|------|-------------|------|-------------|------|
|     | 비목          | 비율   | 비목          | 비율   | 비목          | 비율   |
| 1순위 | 교육비         | 55.1 | 교통비         | 39.1 | <b>식생활비</b> | 53.6 |
| 2순위 | 교통비         | 31.2 | 교육비         | 37.6 | 교육비         | 43.4 |
| 3순위 | 공과금         | 29.7 | <b>식생활비</b> | 33.4 | 교통비         | 30.6 |
| 4순위 | <b>식생활비</b> | 29.7 | 공과금         | 29.9 | 공과금         | 25.4 |
| 5순위 | 정보통신비       | 24.0 | 대출이자비용      | 29.5 | 대출이자비용      | 24.0 |

#### 4. 시민사회·생명운동

##### 2012년은 새로운 시민정치의 해

- 총선과 대선을 앞둔 2012년은 시민정치 세력의 참여가 화두가 되고 있음. 지난해 박원순씨가 서울시장에 당선된 데 이어 민주통합당 창당과정에 참여한 일부 시민운동가들이 4월 총선을 준비하고 있음.
- '탈핵', '탈성장', '탈토건'을 전면에 내세운 녹색당 창당 움직임이 활발함. 서울, 부산, 충남에서 발기인 100명씩 모아서 준비위가 출범, 2월 중 창당을 목표로 활동하고 있음. 주로 환경운동, 에너지 전환운동, 동물보호운동, 생협, 녹색평론독자모임, 풀뿌리운동 관련 사람들과 녹색당에 관심 있는 개인 특히 청년, 여성들이 다수 참여하고 있음. 1월 19일 현재 2200여명이 참가 중임.

##### 시민운동과 생명평화 가치의 만남

- 시민운동과 전통적 사회운동의 인식 전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음. 기후변화, 글로벌 경제위기, 빈부 격차의 심화 등을 겪으며 새로운 방향성과 대안 모색의 여정에 있음.

“..... 2012년은 역사적 전환기입니다. 우리는 지금 문명의 전환기를 맞고 있습니다. 특히 남한 시민사회와 한반도가 그 전환의 한복판에 있습니다. 그 문명의 전환을 어떤 쪽으로 끌

어갈 것인가는 우리 자신에 달려 있다. 특권에 안주하며 사회적 부를 전취하는 토건성장주의에 빠져 한국 사회를 자기파괴적인 양극화사회로 한반도 전체를 갈등과 대결로 몰고 갈 것인가? 아니면 시민이 주도하는 공정하고 소통하는 민주주의 사회, 모든 이들의 행복을 위해 국가가 봉사하는 정의로운 복지국가, 생명, 공존, 평화를 중시하는 지속가능한 생태국가, 평화체제로 나아갈 것인가를 선택해야 합니다. ....”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신년사 중에서

- 강정마을에서 생명평화운동과 시민사회의 만남. 2011년 강정마을에서 두 차례의 생명평화축제를 비롯한 종교행사, 문화행사, 촛불집회가 열림. 희망비행기, 희망버스, 평화의 배 등을 이용해 강정마을을 지지하는 시민단체, 종교단체, 풀뿌리단체, 해외 평화운동가, 관심 있는 시민 개인들이 강정마을 살리기 운동에 참여함. 이런 가운데 강정마을이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었고, 국회는 2012년 제주해군기지 항만과 육상공사에 필요한 예산 1327억원 중 49억원만 남기고 1278억원을 삭감함으로써 해군기지 반대운동에 힘을 실어줌. 한편, 생명평화결사의 생명평화순례단이 1월 14일부터 40일간 강정 마을에서 출발하여 제주 도보 순례를 진행하며, 지역주민과 시민사회활동가들을 만나고, 4.3 영령 추모제를 진행할 계획임.
- 자본주의 시장의 실패에 대한 비판과 우려 속에서 사회적 경제와 협동조합이 대안으로 부각되고 있으며 시민단체들도 이에 대한 높은 관심을 갖고 있음. 지난해 YMCA, 지역주민운동단체 등 시민단체들은 협동조합에 관한 강좌를 진행했으며, 이 같은 관심은 2012년 '유엔이 정한 세계 협동조합의 해' 행사와 2012년 12월 '협동조합 기본법' 발효에 따라 더욱 높아질 것으로 전망됨.
- 강원도내 골프장 건설을 반대하는 주민들을 응원하기 위한 생명버스가 지난해 12월 10일 1차로 출발한 이후 지난 1월 7일 2차로 출발하여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주민들을 지원하는 행사를 진행하였으며, 2월 11일에는 강원도 홍천 골프장 사업 예정지로 3차 버스가 출발할 예정임.

### 탈핵 관련 전문가들의 참여 증가

- 2011년 11월 '탈핵교수모임'이 출범한데 이어서 '핵없는 세상을 위한 의사회'(반핵 의사회)와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탈핵법률가모임)이 1월말 출범을 계획하는 등 전문가들의 탈핵 움직임이 시작되고 있음. 이들은 각각 방사능의 인체 피해 및 원전 주변 주민의 질병 발생과 원전의 상관관계를 조사하고, 국가를 상대로 한 원자력 관련 소송제기, 입법 활동 등을 펼칠 예정임.

### 생명운동 30년, 보통명사가 된 생명운동

- 1981년 원주에서 <생명의 세계관 확립과 협동적 생존의 확장>이라는 문서가 발

표된 이후 생명운동이란 말이 나온 지 30년이 됨. 인터넷 포털 사이트 네이버와 다음의 온라인 국어사전에 생명운동이란 말이 등재되면서 생명운동은 명실상부 보통명사가 되었음.

- 생명평화결사가 올해부터 100년 순례를 시작하기로 하고 고리 원자력발전소로부터 동해안 원전 벨트를 지나 DMZ로 순례할 계획임.
- 무위당 만인회, 귀농운동본부, 인드라마, 생명평화결사, 정토회 등이 한살림과 함께 무위당 서울 서화전을 비롯한 콘서트, 심포지엄 등 '생명운동 컨퍼런스'(가칭)를 논의 중이며, 가톨릭농민회와 두레생협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연대를 모색 중에 있음.

## 5. 2012년 주요 일정

| 일정         | 내용                                              | 장소              |
|------------|-------------------------------------------------|-----------------|
| 1월 24-29일  | 세계사회포럼                                          | 브라질             |
| 1월 25-29일  | 다보스 포럼                                          | 스위스             |
| 2월         | 제 12차 유엔환경계획 집행이사회/<br>세계환경장관회의(UNEP 40주년 기념행사) |                 |
| 3월 11일     | 동일본 대지진 1년                                      |                 |
| 3월 26-27일  | 핵안보정상회의                                         | 서울              |
| 4월 11일     | 19대 총선                                          | 한국              |
| 6월 18-19일  | G20 정상회의                                        | 멕시코             |
| 6월 20-22일  | 지속가능발전세계정상회의(Rio+20)                            | 브라질,<br>리우데자네이로 |
| 7월 1-7일    | 협동조합주간, 협동조합의날(7일)                              |                 |
| 9월 6-15일   | 세계자연보전총회                                        | 제주              |
| 10월 8-11일  | 세계협동조합정상회의                                      |                 |
| 10월 31일    | 유엔의 '세계협동조합의 해' 선포식                             |                 |
| 11월 6일     | 미국 대선                                           |                 |
| 11월 26-30일 | ICA-AP 총회 및 협동조합포럼                              | 일본, 고베          |
| 12월 19일    | 18대 대선                                          | 한국              |
| 12월        | 기후변화당사국총회(18차)                                  | 카타르             |
| 12월 31일    | 현 교토의정서 기한 만료                                   |                 |



**모심의 눈 살림의 길**  
**준비호**

**발행일** 2012년 1월 20일

**발행처** 모심과살림연구소

<http://mosim.or.kr>